

과제목표	■ 반부패 개혁을 위해 부패방지체계 강화,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참여 확대, 국민권익보호, 민관협력형 부패방지체계 강화 등 추진
총평	■ 문재인정부 출범부터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·공정정책을 강력 추진하여 부패인식지수(CPI)가 지속 상승('18년 45위→'19년 39위→'20년 33위) 하는 등 사회 전반의 청렴도·투명도 제고에 기여 ■ 사회 각 분야 불공정 해소를 위한 과제 발굴 및 개선 노력 지속 필요
'20년도 주요성과	■ 반부패 컨트롤 타워 기능 보강으로 범국가적 부패방지체계 구축 • 반부패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* 개정안 국회 제출('20.6월) * 국민권익위 조직 재설계(부패방지권익위 신설, 행정심판 분리 등), 부패신고 사실확인 강화 등 •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근절을 위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* 제정안 국회 제출('20.6월) * 사익추구 금지대상 확대(행정부 이외 입법·사법부, 지자체 등 포함), 직무관련자가 사적 이해관계자인 경우 신고·회피·기피 등 이해충돌방지 8대 행위 기준 등 규정 •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('20.6월)로 포스트 코로나 반부패 추진방향 논의,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이행 점검(22개 과제 완료, 65개 추진중) • 공공기관 채용비리실태 전수조사*, 위탁채용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**('20.12월) * 채용비리 83건 적발(수사의뢰 9건, 징계요구 74건) 및 피해자 구제 추진 ** 비전문가에 의한 서류심사 및 중복 위탁용역 수행 방지 등 ■ 국민 삶과 직결된 생활 속 불공정 관행과 부조리 개선 • 9대 생활적폐 해소를 위한 법률 10건, 대통령령 4건 개정* 완료 * △(의료)시·도 의료기관 개설허가위원회를 통해 사무장 병원 진입 사전 차단(「의료법」, '20.3월) △(조세)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 법제화(「국세기본법 시행령」, '20.2월) △(보조금)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에 보조금법 포함(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, '20.5월) 등 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로 공익침해행위 효율적 예방 •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 183개 추가*('20.11월) * 중대아동학대 행위(아동학대처벌법), 신체 무단촬영(성폭력처벌법), 구조구급활동 방해(119법), 대리점에 대한 본사 갑질 행위(대리점법) 등 • 「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」 개정*('20.5월)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**('20.6월) *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포상금을 최상급까지 지급 가능, 단순업무 수행 중 취득한 불법행위 신고 시 가담사실이 있어도 보상금을 감액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 ** 신고자 인적사항 유출·공개(징역 3년↓, 벌금 3천만원↓ → 징역 5년↓, 벌금 5천만원↓) ■ 중대 부패범죄에 대한 무관용 처벌로 반칙 없는 사회 구현 • 5대 중대 부패범죄* 및 지역토착형 비리** 등 다양한 유형의 부패범죄 적극 수사 * 뇌물·알선수재·알선수뢰·횡령·배임 부패범죄사범 421명 단속, 74명 구속('20.12월) **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자금 편취 사건 등 토착비리사범 290명 단속, 52명 구속('20.12월)

	■ 사회 각계 연대·협력을 통한 반부패 거버넌스 실현 -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구조 간소화(3→2단계), 참여범위 확대(30→40명) 등 정책 제안* 활성화 * 국회 및 지방의회의원 윤리 강화('20.5월), 지자체 정보공개 실효성 제고('20.5월), 기업 내부 감사 실효성 제고('20.10월), 국제반부패회의 민관협력('20.11월) -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에 대해 국민이 직접 감사원에 감사 청구할 수 있도록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0.6월) <정부 출범('17.5~) 이후 핵심 성과>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범정부 반부패체계 구축 *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('17.9월~)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반부패 협력 제도화, 청렴사회 실현을 위한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('18.4월) 및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('18.3월) * 반부패 총괄 기능 수행을 위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안 국회 제출('20.6월)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*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('18.10월), 공익신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(3개월→1년),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한도 상향(20억원→30억원)으로 신고자 보호 강화 * 공익신고자로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 법률 183개 추가('20.11월), 「신고자 포상 및 보상사무 운영지침」 개정('20.5월),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강화를 위한 「부패방지권익위법」 개정('20.6월)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 근절로 부패·불공정 해소 * 출발선에서의 불평등(유치원 및 학사비리, 공공기관 채용비리), 우월적 지위 남용(공공분야 갑질, 권력유착 및 사익편취(보조금 부정수급, 지역 토착비리, 탈세, 보험수급 비리, 재건축 재개발 비리, 안전분야 부패) 등 생활적폐 9개 과제 확정 및 개선대책 추진('18.12월~) * 대통령 주재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('20.6월)로 포스트 코로나 반부패 추진방향 논의, '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' 이행 점검(22개 과제 완료, 65개 추진중) 국가청렴도 제고로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개선 * '20년 부패인식지수(CPI, 국제투명성기구, '21.1월 발표) 61점, 33위('18년 45위, '19년 39위) * 국가경쟁력지수(부패부문, 국제경영개발대학원, '20.6월 발표) 4.6점, 31위('18년 대비 1단계 ↓) * 공공청렴지수(반부패 국가역량 유럽연구센터, '19.12월 발표) 19위 ('17년 대비 5단계 ↑)
개선·보완 필요사항	시민공익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하는 「공익법인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 성과 창출 노력 필요 공직자의 직무수행상 공정성 확보를 위한 「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」 제정안 국회 통과 노력 필요 * 제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정부안 폐기, 제21대 국회 제출('20.6월)